

# 소멸 위기 절박한 전남도, 청년 정착·저출산 극복 백약처방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 수립

15곳 3억씩 들여 청년마을 조성

고흥·해남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산후조리원 3곳 추가 설치

귀농·귀어·귀촌인 유입도 박차

2022년 전남 인구는 182만명으로, 지난 2004년 인구 200만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그 원인은 노인 비율의 증가와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는 우선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확대,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 또 전남으로의 귀어·귀농·귀산·귀촌을 바라는 도시민들을 유치해 지역 공동체에 합류시켜야 한다.

전남도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및 제도 발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전남도는 올해 발굴한 12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사업(사업비 882억원)을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청년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개소, 2023년 10개소 등 전남도내 15곳에 각각 3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창업, 문화·여가 등을 위해 청년이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권역별 '청년문화센터'다. 4층 규모로 청년점포,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순천시와 무안군 2곳에 480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청년들의 주택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구례(사업비 75억원, 연립주택 50세대), 고흥(128억원, 주택 45동), 해남(151억원, 연립주택 60세대) 등에 들어선다. 청년공동체 400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청년 창업을 위해 100개 팀에게 2000만~5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도 시행한다.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전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지역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까지 책임지는 인프라를 갖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대표적 사업이 공공산후조리원이다.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등 5곳에 이미 운영중으로, 지금까지 3400명의 산모가 이용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는 2023년까지 소멸기금 248억원을 들여 목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리커창 총리 환담 “中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 피력”

리커창 중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대기실에서 환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

고,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일련의 전례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리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 및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리 총리의 이런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새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달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尹정부 첫 '예산국회' 초반부터 거친 파열음

행안위 경찰국 예산 없애고

외통·문체위 대통령실 예산 삭감

예결위 '충돌 2라운드'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에서 초반부터 거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열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

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이 '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다.

이를 뒤인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통으로 날아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7천500억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강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